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0월 ~11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프랑스, 건강, 라벨, 유색코드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프랑스, 건강, 라벨, 유색코드제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프랑스, 식품 유색코드제 시험”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프랑스, 식품 유색코드제 시험

프랑스 정부가 식품업계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유색코드' 분류 규정을 10월 26일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일단 10주간에 걸쳐 4 지역 60개 대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유색코드제를 시험 실시한다. 이번 시험 시행을 통해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INSERM)이 디자인한 유색코드도 함께 시험된다.

식품 유색코드제는 프랑스 내 비만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의 과다 정도를 색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유색코드 표시 대상은 식품 내 지방, 포화지방, 설탕, 소금 등이다. 예를 들어 한 식품 내 설탕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경우 적색 및 황색 코드, 이보다 낮은 적정 수준일 경우에는 녹색 코드를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유색 코드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의 성분과 건강 유해 여부를 인식할 수 있다.

EU 식품업계 내 프랑스의 유색코드 표시제 운영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중해 연안 회원국들의 경우 치즈와 올리브유가 '과지방' 코드를 부여받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붉은색, 노란색 라벨 표시가 많을수록 소비자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프랑스는 12월에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영양 성분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로고를 마련하는 보건개혁안을 통과시켰다. EU 집행위는 식품 성분 건강 유해 여부 표시 유색 코드제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2017년 12월까지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식품건강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식품 유색코드와 비슷한 제도로는 영국이 지난 2013년 유사한 '신호등 라벨'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프랑스의 식품 유색코드 정책의 시험 결과가 향후 EU 식품 라벨 정책의 기준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포장을 준비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프랑스의 식품 유색코드제의 시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식품 표시제 변동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수출 제품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